

#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제주 4·3 사건 서술 내용과 향후 집필 방향

한철호\*

- I. 머리말
- II. 제주 4·3 사건 목차와 성격
- III. 제주 4·3 사건 서술 경향과 그 특징
- IV. 제주 4·3 사건 구성 요소와 그 특징
- V. 맺음말 : 향후 제주 4·3 사건 집필 방향

## 국문요약

제주 4·3 사건은 진상 규명과 관련자의 명예 회복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사건의 발생원인과 성격 혹은 평가를 둘러싸고 여전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제주 4·3 사건 관련 내용, 이를 토대로 집필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서술 경향과 구성 요소 및 그 특징을 고찰한 다음, 향후 『한국사』 교과서 내 제주 4·3 사건의 집필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선 집필자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 제주 4·3 사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행히 2018년 7월 확정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학습요소 6개 중에 ‘제주 4·3 사건’이 들어갔다. 아울러 제주 4·3 사건은 ‘통일 정부

\* 동국대학교 역사교육과, hanch777@dongguk.edu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서술하도록 규정되었다. 따라서 집필자들이 제주 4·3 사건을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서술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셈이다.

다음으로 교과서 내 제주 4·3 사건에 대해 서술할 지면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과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시계열성을 고려해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보다 분량이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어졌다. 제주 4·3 사건은 국가 폭력의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평화와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도 모범적인 사례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제주 4·3 사건을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넣음으로써 서술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지만, 많은 분량을 서술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구성·서술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행 『한국사』는 대체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등을 근거로 제주 4·3 사건의 개요를 비교적 충실히 서술하였다. 그러나 학계에서도 제주 4·3 사건의 명칭뿐 아니라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최근의 학계 성과를 적극적으로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 또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본문 외에 다양한 사진·자료와 코너를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나아가 제주 4·3 사건은 세계적으로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거사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으며, 분단의 실체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평화·인권의 소중함과 화해·상생의 메신저로 내세울 만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따라서 집필자들이 이러한 사례를 제주 4·3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주 4·3 사건 관련 연구자·연구·단체들도 교재와 자료를 개발·제공해주어야 한다.

주제어 : 제주 4·3 사건, 교과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집필기준,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한국사』

## I. 머리말

올해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 사건은 발생 후 오랫동안 그 진상이 은폐·왜곡됨으로써 객관적 사실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행히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1999년 12월 국회의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0년부터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의 구성, 2003년 8월 국무회의의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 그해 10월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의 최종 확정 및 정부의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사과 등으로 진상 규명과 함께 국가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사과와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그렇지만 제주 4·3 사건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나 학계에서 아직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이견이 상존하는 실정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 가운데 하나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주 4·3 사건을 공식적으로 처음 접하는 중·고등학교 역사 혹은 한국사 교과서를 꼽을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현재 검정교과서의 기본적인 틀과 내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교육과정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은 역사교육의 논리보다는 정권의 성향이나 정치적 이념에 의해 크게 좌우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교과서의 제주 4·3 사건 서술 역시 예외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교과서의 이념 성향 여부를 가름하는 일종의 잣대가 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제주 4·3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제주 4·3 사건만을 세밀하게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고, 한국현대사의 논쟁점을 전반적으로 살피면서 부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 결과 제주 4·3 사건의 서술 내용과 그 의의를 비교 분석하고 오류를 바로잡는 데에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역사교육학 관점에서 제주 4·3 사건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성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쉽지 않다. 필자 역시 제주 4·3 사건에 대한 교육과정·준거안과 이를 토대로 집필된 교과서의 서술을 유기적으로 살펴해보았으나 역부족이었고, 그 대상도 제7차 교육과정의 『한국 근·현대사』와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에 한정된 것이었다. 최근에는 역사교육과정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주 4·3 관련 내용을 폭넓게 분석한 성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서술했는가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sup>1)</sup>

1) 김득중, 「한국사 교과서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 서술 분석」, 『4·3과 역사』 8, 2008; 지수걸, 「한국 근현대사 논쟁과 10학년 『역사』 교과서 편찬」, 『역사교육』

따라서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참고하되 교육과정·집필기준을 토대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의 제주 4·3 사건 서술 내용과 구성을 분석하고, 새로 집필될 교과서의 기준으로 확정 공고된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집필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의 제주 4·3 사건 관련 내용을 근거로 『한국사』의 목차를 분석하고, 다음으로 『한국사』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서술 내용과 구성 및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앞으로 『한국사』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집필 방향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 II. 제주 4·3 사건 목차와 성격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교육관의 변화보다는 6·25 전쟁(한국전쟁)·10월 유신 등 정치적 사건 혹은 정권 교체를 계기로 개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정권의 성향과 논리가 역사교과서의 내용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sup>2)</sup> 그 결과 역사교육과정은 이념공세의 터전으로 이용당하는 일이 반복되거나 정치적 중립성마저 훼손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명박 정권 말기에 제정된 2009·2011 개정 교육과정 역시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보다 특정집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담은 것이었다. 제주 4·3 사건에 관련된 개정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은 <표1>과 같다.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은 2007·2009 개정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집필

109, 2009; 박태균, 「한국현대사의 논쟁에 대한 재평가와 교과서 수록 방안」, 『역사학보』 205,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부분 분석」, 『역사교육』 116, 2010; 박진동, 「해방후 현대사 교육 내용 기준의 변천과 국사교과서 서술」, 『역사학보』 205, 2010; 한철호, 「고교 역사교과서의 제주 4·3 사건 서술 경향과 과제」, 『사학연구』 103, 2011; 조한준, 「역사과 교육과정 내 제주 4·3관련 내용 분석」; 도면희,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주 4·3 관련 서술 분석」, 『검정정 역사교과서 제주 4·3 집필기준안 연구 발표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7 등 참조

2)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한국 교과교육과정의 변천 : 고등학교』,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최상훈, 「역사과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교육연구』 12-2, 2005; 김한중,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2006 등 참조

자에게 자율성을 제공한다는 교육과정의 大綱化 원칙에 따라 대단원을 포괄적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 자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전 교육과정보다 더 대강화하여 제시했던 탓에 특별히 제주 4·3 사건을 서술할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라는 항목 정도가 제주 4·3 사건과 간접적으로라도 연관이 있었다.

〈표 1〉 2009·2011 개정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제주 4·3 사건

| 개정 교육과정  | 집필기준  |
|--|---|
| <p>(6)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p> <p>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파악하고, 6·25 전쟁의 원인 및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한다. 시기는 8·15 광복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한다.</p> <p>(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p> <p>(나)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 및 그 참상과 영향을 살펴보고, 분단과 전쟁을 겪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본다.</p> | <p>(6)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p> <p>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과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노력을 파악하고, 6·25 전쟁의 원인 및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1960년대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과정을 이해하고,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파악한다. 시기는 8·15 광복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한다.</p> <p>①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 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8·15 광복 이후 전개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파악한다.</p> <p>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 정세와 냉전의 형성 과정을 기술한다. 한반도 38도선을 경계로 남한에는 미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이 진주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모스크바 삼상 회담의 결정에 따른 신탁통치 논란과 미·소 공동 위원회 활동 상황을 소개한다. 미군정 3년 동안 국내에서 전개된 정치 세력들의 동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국가 기틀이 마련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광복은 연합국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 운동의 결과임을 유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은 사실에 유의한다. <b>정부 수립 전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3 사건 및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b></p> <p>② 6·25 전쟁의 원인과 과정 및 그 참상과 영향을 살펴보고, 분단과 전쟁을 겪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본다.</p> <p>6·25 전쟁의 개전에 있어서 북한의 불법 남침을 명확히 밝히고, 전쟁의 발발 배경을 국내외적으로 구분하여 서술한다. 전쟁의 전개 과정, 결과 등을 서술하고 휴전선의 형성과 남북의 대치 과정을 기술한다. 전쟁에 따른 물질·인적 피해를 서술하고, 남북 간의 대립과 이산가족의 고통 등 전쟁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설명한다. 국군뿐만 아니라 소년병·학도의용군 등의 참전과 국민의 노력 및 유엔의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였음에 유의한다. 전쟁 이후 남·북한의 전후 복구 과정</p> |

|  |
|--|
| 을 비교하도록 한다. 6·25 전쟁이 미친 주변 국가의 국제 정치적 위상 변화 등에 유의한다. 6·25 전쟁과 같은 전쟁과 분단을 겪은 베트남·독일 등의 사례에도 유의한다. |
|--|

그런데 집필기준에는 이전 교육과정과는 다르게 구체적으로 “정부 수립 전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3 사건 및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라고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서술기준이 제시되었다. 이처럼 그 이전의 교육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제주 4·3 사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비록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집필기준에 제주 4·3 사건이 명시됨으로써 집필자는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 이를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제주 4·3 사건의 배경과 성격을 “정부 수립 전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이라고 규정한 점은 문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바로 그 앞에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 받은 사실에 유의한다”는 내용으로 미루어, 이는 간접적으로 제주 4·3 사건이 자칫 5·10 총선거에 기반한 대한민국의 통통성을 부정하는 의미를 내포하거나 당시 좌우 대립과 사회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제주 4·3 사건이 단순히 정부 수립과정에서 일어난 갈등과 혼란이 아니라 국가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제주도의 주민이 희생당했다는 사실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은 『한국사』에 제주 4·3 사건을 서술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라는 대단원명은 교육과정에 의거해 8종 모두 동일하지만,<sup>3)</sup> 대단원 아래 중·소단원의 구성은 출판사별로 다르고 중단원명과 소단원명, 소주제명도 각각 다르다. 특정한 대단원의 목차 구성은 출판사별로 집필자의 역사교육적 고민에 따라 이루어지며, 중요한 사건이나 용어는 중단원이나 소단원, 소주제별로 따로 구성된다. 역사교육적 고민이란 해당 단원 또는 주제가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인 교사와 학습자인 학생이 교수·학습을 실현할 수 있게 하거

3) 현행 역사과의 중·고등학교의 각종 교과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대단원명은 그대로 사용하고, 교육과정 대강화 정책에 따라 중단원 및 소단원, 소주제는 집필진의 임의대로 구성하고 제목을 정하고 있다.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사도 이를 따르고 있다.

나 학습자가 자기주도적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집필자의 역사교육적 고민은 한정된 지면 내에서 구성되어야 하는 제약을 받기도 한다.

결국 역사 교과서의 집필자들은 저마다의 고민을 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구성하며, 자신의 역사교육적 고민을 구현하기 위해 대단원 안의 목차를 구성한다. 8종의 『한국사』는 현대사 단원인 VI단원에 58-72쪽을 할애하였다. 크기는 14쪽이라는 분량의 차이가 나지만, 각각의 교과서는 정해진 지면 안에서 본문과 각종 요소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종합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단원을 구성했던 것이다. 제주 4·3 사건은 현대사 단원인 VI단원 안에서 첫 번째 중단원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이다. 교과서별로 중단원 내 제주 4·3 사건이 들어간 목차 구성(<표2>)을 중심으로 사건의 성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학사는 ‘1. 냉전 질서의 형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이라는 중단원 아래 세 번째 소단원 ‘3) 미·소 공동 위원회와 단독 정부 수립 활동’의 세 번째 소주제 ‘단독 정부 수립 활동과 좌익의 방해’ 안에 제주 4·3 사건을 서술하였다. 이에 앞선 2개의 중단원의 제목은 ‘1) 소련의 팽창 정책과 미국의 봉쇄 정책’, ‘2) 아시아의 공산화와 남북의 분단’인데, 이는 대단원 안에서 소련과 미국의 대립인 냉전과 아시아의 공산화 물결이라는 세계사의 배경 속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다루었음을 보여준다. 공산화의 물결을 막아내기 위한 단독 정부 수립 활동을 긍정적인 것으로, 이를 방해하는 좌익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각각 설정하고 그 안에서 제주 4·3 사건을 파악했던 것이다. 다음 소단원 ‘4) 남북한에서의 좌우의 투쟁과 정부 수립’에서는 두 번째 소주제인 ‘남한에서의 정부 수립과 유엔’에서 좌익 세력의 방해 등으로 총선거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주 4·3 사건을 간접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목차 상으로만 보면, 자연스럽게 제주 4·3 사건은 단독 정부 수립을 방해한 좌익의 활동으로만 인식될 소지가 다분하다.

금성은 중단원 ‘1.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아래 세 번째 소단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에서 9개의 소주제를 설정했는데, 그 중 세 번째·네 번째 소주제인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과 ‘5·10 총선거 실시’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루었다. 그에 앞선 소단원에서는 세계사적 배경인 냉전과 8·15 광복으로 생긴 해방 공간 속에서 신국가 건설 운동을 펼치는 한

반도를 조망했던 사실로 미루어, 그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여러 주체가 갈등하는 가운데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표 2〉 ‘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의 제주 4·3 사건 관련 목차

| 교학사  | 금성  |
|--|---|
| <p>1. 냉전 질서의 형성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p> <p>1) 소련의 팽창 정책과 미국의 봉쇄 정책</p> <p>2) 아시아의 공산화와 남북의 분단</p> <p>3) 미·소 공동 위원회와 단독 정부 수립 활동</p> <p>·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의 결정안</p> <p>·미·소 공동 위원회</p> <p>·단독 정부 수립 활동과 좌익의 방해</p> <p>4) 남북한에서의 좌우의 투쟁과 정부 수립</p> <p>·북한에서의 정권 수립 과정</p> <p>·남한에서의 정부 수립과 유엔<sup>4)</sup></p> <p>·친일과 청산의 과제</p> <p>2. 6·25 전쟁</p> <p>1) 소련의 적화 전략과 김일정, 중국</p> <p>2) 6·25 전쟁의 전개 과정</p> <p>·준비된 남침과 신속한 대응<sup>5)</sup></p> | <p>1. 8·15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p> <p>1) 냉전의 기운이 동아시아로 확산되다.</p> <p>2) 8·15광복과 신국가 건설 운동</p> <p>3)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p> <p>·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 연합의 결정</p> <p>·남북 협상</p> <p>·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p> <p>·5·10 총선거 실시</p> <p>·대한민국 정부의 수립</p> <p>·북한 정부의 수립</p> <p>·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노력</p> <p>·농지 개혁</p> <p>·친일과 청산의 과제</p> <p>2. 6·25 전쟁과 분단의 고착화</p> <p>3. 자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 기본권의 성장</p> <p>1) 자유의 종이 울리다.</p> <p>·이승만 정부의 독재 정치<sup>6)</sup></p> <p>·4·19 혁명</p> |
| 두산동아   | 리베르스쿨   |
| <p>1. 동아시아에 냉전이 확산되다</p> <p>2.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p> <p>·광복을 맞이하다</p> <p>·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오다</p> <p>·3국 외상 회의에서 한국 독립 방안을 결정하다</p> <p>·미·소 공동 위원회를 개최하다</p> <p>·통일 정부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다</p> <p>3.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p> <p>4. 6·25 전쟁이 일어나다</p>  | <p>1. 대한민국 정부 수립</p> <p>1) 통일 정부 수립 운동</p> <p>2) 좌우의 세력의 갈등</p> <p>3) 대한민국 정부의 출범</p> <p>·한국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다</p> <p>·남북 협상이 진행되다</p> <p>·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싸고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다</p> <p>·대한민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받다</p> <p>4) 친일과 청산과 농지개혁</p> <p>2. 6·25 전쟁</p>  |
| 미래엔  | 비상교육  |
| <p>1.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p> <p>1)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냉전 체제의 형성</p> <p>2) 광복과 미·소 군정</p> <p>3) 통일 정부 수립 운동</p> <p>·미·소 공동위원회, 무기한 연기되다</p> <p>·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다</p> <p>·유엔 소총회, 남한 단독선거를 결의하다</p> <p>·김구와 김규식, 남북 협상을 전개하다</p> <p>·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다</p> <p>·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나다</p>   | <p>1. 냉전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p> <p>1) 냉전 체제가 등장하다</p> <p>2) 광복과 함께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p> <p>3)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p> <p>·대한민국 정부의 수립</p> <p>·좌절된 친일과 청산</p> <p>·농지 개혁의 단행</p> <p>·북한 정부의 수립</p>  |



| 지학사   | 천재교육   |
|---|--|
| <p>1.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p> <p>(1) 냉전 체제의 성립</p> <p>(2) 8·15 광복</p> <p>(3) 신탁통치를 둘러싼 대립</p> <p>(4) <b>대한민국 정부의 수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반도 문제가 유엔에 상정되다</li> <li>· 단독 총선거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다</li> <li>· <b>단독 총선거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다</b></li> <li>·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li> </ul> <p>2. 6·25 전쟁</p> | <p>1. 냉전의 전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p> <p>주제 1. 전후 처리와 냉전 체제의 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합국의 전후 처리</li> <li>· 유럽에서의 냉전</li> <li>· 동아시아에서의 냉전</li> </ul> <p>주제 2. 8·15 광복과 통일 국가 수립 운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15 광복과 미·소 양군의 진주</li> <li>·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와 좌우 대립</li> <li>· 미·소 공동 위원회와 좌우 합작 운동</li> <li>· 남북 협상</li> </ul> <p><b>주제 3. 대한민국 정부 수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대한민국 정부의 수립</b></li> <li>· <b>정부 수립을 전후한 갈등</b></li> <li>· 새로 출범한 대한민국의 과제</li> <li>· 북한 정부의 수립</li> </ul> |

두산동아는 두 번째 중단원 ‘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 아래 다섯 번째 소단원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다’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루었다. 냉전의 세계사적 배경 속에서 광복을 맞이하고 미·소의 갈등 속에서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가운데 제주 4·3 사건이 배치된 것이다. 비록 제주 4·3 사건이 소재목으로 설정되지 않았지만,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간접적으로나마 그 성격을 규정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리베르스쿨은 첫 번째 중단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아래 세 번째 소단원 ‘3) 대한민국의 출범’의 세 번째 소주제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싸고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다’에서 제주 4·3 사건이 들어갔다. 이처럼 소주제명에 제주 4·3 사건을 명시한 것은 학습자에게 이 사건의 위상과 중요성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제주 4·3 사건은 그 앞의 소주제명

- 4)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 지역에서 5·10 총선거는 성공리에 실시되었다. 제주도의 3 개 선거구 중 2곳에서는 이듬해에 선거가 실시되었다.”(307쪽).
- 5) ‘더 알아보기 : 공간 빨치산(조선 인민 유격대)의 활동’ “한반도에는 광복 직후 남로당의 활동을 통하여 전투적 성격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이 상당수 있었다. 이들은 대구 10·1 사건을 일으키고, 제주도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을 통하여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북한의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지지하였다.”(312쪽).
- 6) “이승만 정부는 집권 초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실업자 급증과 식량 부족,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적 혼란이 컸으며, 제주 4·3 사건의 여파로 사회가 어수선하였다.”(385쪽).

인 ‘통일 정부 수립 운동’과 달리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되었다.

미래엔은 첫 번째 중단원 ‘1.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 내 세 번째 소단원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의 다섯 번째 소주제명으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다’를 붙였다. 이는 리베르스쿨과 동일하지만, 제주 4·3 사건을 단독 정부 수립이 아니라 통일 정부 수립 운동으로 파악한 점은 다르다. 또 목차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다음 소주제명으로 유일하게 ‘여수·순천 10·19 사건이 일어나다’를 제시함으로써 제주 4·3 사건과의 연관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비상교육은 첫 번째 중단원 ‘1. 냉전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아래 세 번째 소단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다’의 첫 번째 소주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루었다. 여기에는 제주 4·3 사건이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정에서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가 드러나지 않는다.

지학사는 첫 번째 중단원인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내 네 번째 소단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의 세 번째 소주제 ‘단독 총선거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다’에서 제주 4·3 사건을 서술하였다. 이는 그 앞 소주제 ‘단독 총선거를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다’와 짝을 이루면서 제주 4·3 사건을 단독 총선거 반대 움직임으로 규정했음을 알 수 있다.

천재교육은 첫 번째 중단원 ‘1. 냉전의 전개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아래 세 번째 소단원 ‘주제3.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첫 번째 소주제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에서는 제주 4·3 사건의 명칭만 간단히 제시되었고, 두 번째 소주제 ‘정부 수립을 전후한 갈등’에서 제주 4·3 사건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다. 제주 4·3 사건은 하나의 소주제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부 수립 과정에서 일어난 갈등으로 파악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한국사』 8종의 목차에서 제주 4·3 사건은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다. “정부 수립 전후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으로 나타난 제주 4·3 사건 및 친일파 청산 노력 등을 기술하도록 유의한다”는 집필기준에 의거해 제주 4·3 사건은 모두 중단원 ‘정부 수립’ 아래 배치되었지만, 소단원에서는 편차가 나타났다. 제주 4·3 사건이 들어간 소단원의 소제목은 집필기준을 거의 충실하게 적용해서 정부 수립을 위한 갈등(금성), 단독 정부 수립을 둘러싼 사건(리베르스쿨), 정부 수립을 전후한 갈등(천재교육), ‘단독 총선거를 반

대하는 움직임(지학사) 등이거나 단순히 정부의 수립(비상교육)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집필기준과 달리 제주 4·3 사건을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나 운동(두산동아, 미래엔)으로 파악한 것도 있는 반면, 단독 정부 수립 활동에 대한 좌익의 방해(교학사)로 간주한 것도 있었다. 이러한 소주제명은 본문의 내용을 결정적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제주 4·3 사건에 대한 관점과 서술 방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아울러 소주제명이지만 제주 4·3 사건을 적시한 것(리베르스쿨, 미래엔)은 학습자에게 이 사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Ⅲ. 제주 4·3 사건 서술 경향과 그 특징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는 제주 4·3 사건이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 충돌과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되어 있다.<sup>7)</sup> 이를 근거로 『한국사』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서술 경향을 편의상 배경, 주도세력과 경과, 결과와 피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제주 4·3 사건의 배경에 관해서는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혹은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의거한 듯 1947년 3·1절 기념대회를 거행한 뒤 시가행진하던 도민에게 경찰이 발포한 것을 계기로 서술한 교과서가 많았다(교학사, 금성, 두산동아, 미래엔, 천재교육). 본문에는 없지만 하단코너에 기술된 것도 있다(비상교육). 이는 2007·2009 개정 교육과정의 『한국사』 6종 가운데 한 곳에서만 1947년 3월 1일 기념대회를 서술한 것에 비하면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할 만하다. 리베르스쿨과 지학사는 이에 대한 서술이 없다.

7)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536쪽.

그러나 이 내용은 교과서별로 약간의 편차를 보인다. 예컨대, 교학사는 이 대회에서 남로당 제주 도위원회가 조직총동원을 내려 각종 구호를 외치게 했으며, 당일 기마경찰이 모르고 아이를 쳤음에도 시위를 구경하던 군중이 경찰서로 몰려갔기 때문에 경찰이 발포해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서술하였다. 이를 보면 경찰의 발포 원인이 아이를 친 지 모르는 기마경찰에게 항의하기 위해 군중이 경찰서로 몰려간 데 있는 듯하다. 이는 사실에도 어긋난다. 또 금성은 남한의 단독 선거에 따른 갈등이 가장 컸던 곳이 제주도였다는 전체 아래, 경찰의 발포에 대한 도민들의 반발에 미군정청과 서북청년단 등 우익 단체가 오히려 강압적으로 대응해 사태가 악화되었다고 자세히 경과를 썼다. 천재교육은 도민들이 시위에 관리들까지 가담한 총파업을 일으켰으며, 미군정이 파견한 경찰과 우익 청년 단체가 진압하는 과정에서 도 주민들이 가혹한 탄압을 받아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고 자세히 서술하였다. 미래엔은 경찰의 발포로 주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시위자 검거과정에서 수많은 일반인이 체포되었기 때문에 미군정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다고 기술하였다. 비상은 경찰의 무분별한 발포로 초등학교를 비롯한 주민 6명이 죽었고, 분노한 도민은 총파업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두산동아는 경찰의 발포를 계기로 무장 봉기가 일어났다고 간단하게 적었다.

다음 제주 4·3 사건의 주도세력을 살펴보면, 남로당(교학사), 남로당 제주도당(금성, 천재교육), 남조선 노동당(리베르스쿨, 지학사), 좌익 중심의 무장대(두산동아), 좌익세력(미래엔), 공산주의자와 일부 주민(비상교육) 등으로 다양하다. 여기에는 집필자의 다양한 시각이 담겨 있지만, 좀 더 명확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듯하다. 또 주도세력의 목적이나 원인에 관해서는 5·10 총선거 반대(교학사, 리베르스쿨), 단독 선거 반대(지학사), 단독 선거 반대와 미군 철수(금성), 미군 철수와 단독 정부 수립 반대(두산동아, 비상교육), 단독 선거 저지와 통일 정부 수립(미래엔, 천재교육) 등을 꼽았다. 5·10 총선거 혹은 단독 선거 반대가 많았지만, 이를 단독 정부 수립 반대와 통일 정부 수립으로 달리 표현하거나 미군 철수를 서술한 한 것도 눈에 띈다.

이들 중 교학사는 중단원을 달리해 본문이 아닌 하단 코너에서 제주 4·3 사건을 다시 언급했는데,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두 번째 중단원 '2. 6·25 전쟁의 전개 과정' 아래 첫 번째 소단원 '준비된 남침과 신속한 대응'의 '더 알아보기 : 공산 빨치산(조선 인민 유격대)의 활동'에서 광복 직후 남로당의

활동을 통해 전투적 성격을 가진 상당수의 공산주의자들이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 등을 통해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국을 저지하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을 지지하였다고 서술하였다(312쪽). 즉, 제주 4·3 사건의 주도세력은 남로당에서 남로당 내 일종의 과격파 공산주의자들로, 그 목적도 총선거 반대에서 노골적인 대한민국의 건국 저지로 각각 바뀌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대한민국 혹은 단독 정부 수립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쓴 것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건국 저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지지’로 직결되는 뉘앙스를 던져주는 것은 제주 4·3 사건의 성격을 왜곡할 소지가 다분하므로 더더욱 문제가 된다고 여겨진다.

주도세력의 무장봉기 후 경과에 대해서는 경찰서(교학사, 지학사, 천재교육)와 공공 기관(교학사)이나 서북 청년회 등 우익단체(천재교육)를 습격했다고 서술한 것도 있고, 경찰·군인 및 우익 청년단체와 맞섰다(두산동아)고 쓴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 무장봉기에 대응해서는 이승만 정부가 군인·경찰·우익 단체들을 동원해 대규모 진압 작전을 벌였다(금성), 미군정이 극우 청년들·경찰·군대를 파견해 진압에 나섰다(리베르스쿨), 미군정이 무력 진압을 시도했다(미래엔), 정부는 병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진압 작전을 펼쳤다(지학사), 미군정이 경찰과 군대를 동원해 무력 진압에 나섰다(천재교육)는 등으로 서술되었다. 본문이 아니라 하단 코너에 미군정과 정부가 군대와 경찰을 앞세워 진압했다고 쓴 것도 있다(비상교육). 진압의 주체를 정부로 보기도 하고 미군정으로 파악하기도 했으며, 양쪽을 모두 거론하기도 하는 등 차이가 드러난다. 진압에 동원된 세력도 군인·경찰·우익 단체를 모두 적시한 것도 있지만, 한 두 개만 적은 것도 있다. 단, 교학사는 무력 진압을 전혀 쓰지 않은 채 단순히 “사건을 수습”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제주 4·3 사건의 결과에 관해서는 모든 교과서가 본문이나 본문 외 구성 요소에서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되었고, 3개 선거구 중 두 곳에서 선거가 치러지지 못한 사실을 기술하였다. 단, 교학사는 소단원을 달리해 남한의 정부 수립 과정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제주도를 제외한 남한 전 지역에서 5·10 총선거는 성공리에 실시되었다. 제주도의 3개 선거구 중 2곳에서는 이듬해에 선거가 실시되었다”고 서술하였다(306쪽).

무고한 희생자 수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단순히 많다거나(교학사, 두산동아) 큰 피해를 입었다(리베르스쿨, 지학사)고만 서술한 것도 있는 반면 2만 5

천 명 이상(금성) 혹은 수만 명(비상교육, 천재교육)으로 적는 등 편차가 있다. 미래엔은 제주 4·3 사건과 여수·순천 10·19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규모 민간인 학살도 일어났지만 오랜 기간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교학사에는 ‘무고한 민간인의 많은 희생’과 더불어 유일하게 “많은 경찰과 우익 인사가 살해당하였다”는 사실이 서술되었다. 이처럼 양측의 희생자 수를 밝히지 않은 채 병렬적으로 서술한 것은 마치 양측 모두 비슷한 희생을 당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학살 및 피해 규모, 대규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주체를 명시해줄 필요가 있다.

또 본문이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에 희생자와 피해 상황을 기록한 것들도 있다. 두산동아는 사진설명에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를 근거로 당시 제주도민 약 28만 명 중 희생자가 2만 5천에서 3만 명에 이른다고 기록하였다. 리베르스쿨 역시 하단 코너 ‘도움글’에서 “제주 4·3 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6·25 전쟁 다음으로 인명 피해가 컸던 비극적인 사건이었다”면서 ‘토벌대’가 제주도 169개 마을 중 3분의 2 이상인 130여 개 마을을 불태웠으며, 희생자는 2만 5천 명~3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제시하였다. 미래엔은 사진 설명에서 어린이와 부녀자를 포함해 당시 제주 주민의 10%가 넘는 2만 5천~3만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적었다. 지학사는 날개단에 희생자들의 인원이 아니라 신고 건수를 제시했는데, 신고 건수는 희생자 수에 크게 못 미치는 사망자 10,715건, 행방불명 3,171명이다. 이들 가운데 피해 상황과 희생자 수를 제주도(민) 전체의 비율로 제시한 것은 단순히 숫자를 적은 것보다 얼마나 무고한 희생이 있었는지를 자연스럽게 파악하는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표 3〉 제주 4·3 사건의 본문 내용

|      |                         | 교학사 | 금성 | 두산동아 | 리베르스쿨 | 미래엔 | 비상 | 지학사 | 천재 |
|------|-------------------------|-----|----|------|-------|-----|----|-----|----|
| 배경   | 1947년 3·1절 기념 대회 경찰의 발포 | ○   | ○  | ○    |       | ○   | ○  |     | ○  |
|      | 미군정청의 강압 대응             |     | ○  |      |       |     |    |     | ○  |
| 주도세력 | 남로당                     | ○   |    |      |       |     |    |     |    |

|                |                               |   |   |   |   |   |   |   |   |
|----------------|-------------------------------|---|---|---|---|---|---|---|---|
|                | 남로당 제주도당                      |   | ○ |   |   |   |   |   | ○ |
|                | 남조선 노동당                       |   |   |   | ○ |   |   | ○ |   |
|                | 좌익 무장대                        |   |   | ○ |   |   |   |   |   |
|                | 좌익 세력                         |   |   |   |   | ○ |   |   |   |
|                | 공산주의자                         |   |   |   |   |   | ○ |   |   |
| 무장<br>봉기<br>목적 | 총선(단독 선거) 반대                  | ○ | ○ |   | ○ | ○ |   | ○ | ○ |
|                | 단독 정부 수립 반대                   |   |   | ○ |   |   | ○ |   |   |
|                | 통일 정부 수립                      |   | ○ |   |   | ○ |   |   |   |
|                | 미군 철수                         |   |   | ○ |   |   | ○ |   | ○ |
| 경과             | 경찰서 습격                        | ○ |   |   |   |   |   | ○ | ○ |
|                | 공공 기관 습격                      | ○ |   |   |   |   |   |   |   |
|                | 우익 단체 습격                      |   |   |   |   |   |   |   | ○ |
| 대응             | 정부의 군인·경찰·우익<br>단체 동원과 대규모 진압 |   | ○ |   |   |   |   |   |   |
|                | 정부의 병력 투입과 진압                 |   |   |   |   |   |   | ○ |   |
|                | 미군정의 군인·경찰·<br>우익 단체 파견과 진압   |   |   |   | ○ |   |   |   | ○ |
|                | 미군정                           |   |   |   |   | ○ |   |   |   |
|                | 미군정·정부의<br>군대·경찰 동원과 진압       |   |   |   |   |   | ○ |   |   |
|                | 희생자                           | ○ |   | ○ |   |   |   |   |   |
| 희생<br>자        | 크다                            | ○ |   | ○ |   |   |   |   |   |
|                | 큰 피해                          |   |   |   |   | ○ |   | ○ |   |
|                | 2만 5천 명 이상 희생                 |   | ○ | ○ | ○ | ○ |   |   |   |
|                | 수만 명                          |   |   |   |   |   | ○ |   | ○ |
|                | 희생자 신고 건수                     |   |   |   |   |   |   | ○ |   |
|                | 경찰·우익의 피살                     | ○ |   |   |   |   |   |   |   |

#### IV. 제주 4·3 사건의 구성 요소와 그 특징

교과서는 본문과 각종 사진·도표·자료, 그리고 탐구활동 등 각종 코너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 관계를 맺으면서 완성도를 높여준다. 특히 집필자의 관점과 의도에 따라 어떤 내용은 본문에 들어가기도 하고 본문 외의 요소로 배치된다. 일반적으로 본문의 내용이 가장 중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역사교육에서는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만큼이나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고 역사인식·이해력·판단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교과서들 중에는 주제에 따라 본문보다 구성 요소의 분량이 더 많은 경우도 많다. 이는 자기주도학습이나 탐구활동 등의 비중이 점차 커져가는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제주 4·3 사건도 교과서의 본문과 그 외의 구성 요소들이 얼마나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구성되었는가를 살펴보아야만 비로소 그 역사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교학사는 본문 이외에 사진자료와 날개단의 용어설명을 제시하였다. 용어 설명은 ‘제주 4·3 사건’으로,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를 실었다.’<sup>8)</sup> 사진은 ‘제주 4·3 사건 때 군경의 설득으로 하산하여 심문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라는 설명글이 달려 있다. 이는 동일한 사진에 ‘제주 4·3 사건 당시 심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제주도민들’이라고 이름을 붙인 금성·비상교육의 설명글과 비교된다. 따라서 이 사진의 설명에서 “군경의 설득으로 하산하여”라는 구절은 무력진압을 전혀 쓰지 않은 채 단순히 “사건을 수습”하였다는 본문의 내용과 짝을 이루면서 군경이 적어도 대규모 학살과 무관한 채 제주도민을 보호했다는 느낌을 주는 듯하다.

금성은 날개단의 사진자료와 용어설명, 그리고 하단의 ‘더 알아보기’로 구성하였다. 사진은 교학사와 동일한 것인데, ‘심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제주도민’이라는 제목이 붙었다. ‘제주 4·3 사건’에 대한 용어설명은 국회의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거의 동일하며, 본문에 서술하지 않았던 1949년 제주도의 선거 실시 사실을 추가함으로써 제헌 국회에 제주도 대표를 선출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오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명확히 하였다. 하단 코너의 ‘더 알아보기’는 ‘제주 4·3 사건, 그리고 평화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제주 4·3 사건에 대해 사과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표문(2003. 10.31)’과 사진(‘제58주년 4·3 희생자 위령제에서 묵념하는 노무현 대통령’)을 제시한 다음, 1980년 후반 이후 진상 규명 움직임과 국회의 특별법 제정 및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 사실을 간략하게 적었다.

8) 날개단의 용어설명 ‘제주 4·3 사건’은 초판인 2014년에는 없었지만, 2016년판에는 추가되었다.



이는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보완하면서 제주 4·3 사건을 평화와 인권 문제로 확산하려는 노력을 부각하려 한 듯하다.

두산동아는 교학사와 마찬가지로 날개단의 ‘제주 4·3 평화 공원 위령탑’ 사진자료만으로 단순하게 구성하였다. 사진에는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희생자 수를 밝히고, 2003년 정부의 공식 사과를 간단히 서술한 설명글이 달려 있다. 정부의 사과 후 2008년에 조성된 평화 공원 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제주 4·3 사건이 지닌 평화의 이미지로 보여주려 했다고 생각된다.

리베르스쿨은 날개단의 사진자료와 하단의 ‘도움글’을 제시하였다. ‘서북청년회’라는 제목의 사진에는 “남한으로 넘어온 이북 5도의 청년들이 결성한 우익 반공 단체로 제주 4·3 사건의 진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는 설명글이 달려 있다. 이로써 본문에 언급된 ‘극우 청년들’은 바로 서북청년회 소속임을 알 수 있다. 하단 코너의 ‘도움글’ 제목은 ‘제주 4·3 사건과 진상 규명’이며, 제주 4·3 사건 당시 토벌대의 무자비한 진압에 따른 피해 현황을 서술하고,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소개하면서 희생자의 숫자를 제시하였다. 단, 여기에서 근거로 들은 ‘특별법’은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보고서』의 오기이다. 여기에서 이에 짝해 실린 ‘제주의 학교 운동장에서 무장대 협력자를 가려내는 심문반’ 사진은 수많은 제주도민들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미래엔은 하단 코너 ‘사건 속으로’의 ‘제주 4·3 사건’에서 ‘제주 4·3 사건의 진상 규명 및 명예 회복을 위한 위원회 보고서(2003)’를 자료로 제시한 뒤, 특별법과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등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및 사과, 명예 회복 노력을 서술하였다. ‘과거사 정리 기본법’으로 여수·순천 10·19 사건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서술한 것은 두 사건의 관련성을 시사해준다. 이에 짝하는 사진자료로 ‘제주 4·3 평화 공원 모자상’을 넣어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면서 본문에서 서술하지 않았던 희생자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비상교육은 하단 코너 ‘사건 속으로’의 ‘제주 4·3 사건’에서 본문에서 간략하게 서술했던 배경과 경과 및 희생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특별법’ 제정과 그에 따른 정부의 사과를 덧붙였다. 이에 짝하는 사진은 교학사·금성과 동일한 것으로, 제목은 ‘심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제주도민’이다.

지학사는 사진이나 하단 코너 없이 날개단의 ‘제주 4·3 사건의 발발과 전개’에서 제주도 3·1절 기념식 이후 사건의 경과와 피해 상황, 그리고 ‘특별법’ 제정과 제주 4·3 평화 재단(2008) 설립을 서술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피해 상황은 희생자 수가 아니라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신고 건수이다. 다른 교과서와 달리 본문의 내용보다 날개단의 설명이 분량도 더 많고 내용도 더 자세한 점이 특이하다.

천재교육은 하단 코너의 ‘생각넓히기’에서 ‘제주 4·3사건,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이라는 주제로 ‘특별법’, 진상 조사 보고서,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소개하고, 평화 공원과 평화 기념관의 설립 목적을 서술하였다. 또 교과서들 중 유일하게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의 누리집을 알려주고 “‘제주 4·3 사건’ 방에서 전개과정을 더 알아보자”라는 학생 활동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누리집을 통해 제주 4·3 사건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고 좀 더 자세히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된다. 이와 짝하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제 모습(2009)’ 사진도 과거의 사건 진상보다 미래의 화해·평화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교과서들은 본문 외에 구성 요소를 통해 다양하게 제주 4·3사건에 관해 서술하였다. 단순히 사진이나 추가 설명만을 넣은 것도 있었지만, 대체로 하단 코너를 설정해 본문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최근의 진상 규명 및 화해·인권을 강조하였다. 본문에서 주로 제주 4·3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결과 등 사건의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역사적 상황을 서술하는 데 역점을 두었던 반면, 다양한 구성 요소에서는 최근의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가 해결하거나 지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본문과 짝하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과거의 진상 규명과 미래의 당면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려는 의도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지면의 제약 탓으로 여겨지지만, 학생 스스로가 사건의 실상과 의미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탐구활동 등은 매우 적었다고 판단된다.

〈표 4〉 제주 4·3 사건의 본문 외 구성 요소

|           |   |
|-----------|---|
| 교학사       | <p><b>사진자료</b>(제주 4·3 사건 때 군경의 설득으로 하산하여 심문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p> <p><b>(날개단)용어설명</b>(제주 4·3 사건 :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p>  |
| 금성사       | <p><b>(날개단)사진자료</b>(제주 4·3 사건 당시 심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제주도민들)</p> <p><b>(날개단)용어설명</b>(제주 4·3 사건 :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 + 5·10 총선거 미실시 및 1949년에 3개 선거구 중 2개는 실시하였음)</p> <p><b>(하단 코너)더 알아보기</b>(제주 4·3 사건, 그리고 평화와 인권)</p> <p>-노무현 대통령 발표문(2003.10.31.)</p> <p>-<b>사진자료</b>(제58주년 4·3 희생자 위령제에서 묵념하는 노무현 대통령)</p> |
| 두산<br>동아  | <p><b>(날개단)사진자료</b>(제주 4·3 평화 공원 위령탑) + 희생자의 규모(25,000~30,000명) + 정부의 공식 사과(2003) 소개</p>  |
| 리베르<br>스쿨 | <p><b>(날개단)사진자료</b>(서북청년회 ; 남한으로 넘어온 이북 5도의 청년들이 결성한 우익 반공 단체로 제주 4·3 사건의 진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p> <p><b>(하단 코너)도움글</b>(제주 4·3 사건과 진상 규명)</p> <p>-토벌대의 무자비한 진압실상</p> <p>-제주 4·3 사건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 + 희생자의 규모</p> <p>-<b>사진자료</b>(제주의 학교 운동장에서 무장대 협력자를 가려내는 심문반)</p>  |
| 미래엔       | <p><b>(하단 코너)사건 속으로</b>(제주 4·3 사건)</p> <p>-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보고서(2003)</p> <p>-제주 4·3 사건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p> <p>-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2005)</p> <p>-<b>사진자료</b>(제주 4·3 평화 공원 모자상) + 희생자의 규모(25,000~30,000명) 제시</p>  |
| 비상<br>교육  | <p><b>(하단 코너)</b>(제주 4·3 사건)</p> <p>-제주 4·3 사건의 경과 및 희생 상황 설명</p> <p>-2000년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 제정 + 정부의 사과(2003)</p> <p>-<b>사진자료</b>(심문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제주 도민들)</p>   |
| 지학사       | <p><b>(날개단)내용설명</b>(제주 4·3 사건의 발발과 전개)</p> <p>-제주 4·3 사건의 경과 설명</p> <p>-제주 4·3 사건 위원회의 인명 피해 신고 현황(신고 건수 사망자 10,715건, 행방불명 3,171명)</p> <p>-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p> <p>-제주 4·3 평화 재단(2008)</p>   |
| 천재<br>교육  | <p><b>(하단 코너)생각넓히기</b>(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위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p> <p>-제주 4·3 사건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2000)</p> <p>-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진상 조사 보고서(2003) + 노무현 대통령의 공식 사과</p>   |

|   |
|---|
| -평화 공원, 평화 기념관(2008)                    |
| -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누리집 소개 |
| -사진자료(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추모하는 위령제 모습(2009)) |

## V. 맺음말 : 향후 제주 4·3 사건의 집필 방향

지금까지 역사교과서 집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의 4·3 관련 내용, 이를 토대로 집필된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서술 경향과 구성 요소 및 그 특징을 고찰해보았다. 여기에서는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제주 4·3 사건이 『한국사』 교과서에 바람직스럽게 집필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현행 검정제도 하에서는 집필자들이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으로 삼는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제주 4·3 사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2009·2011 개정 교육과정과 형식은 다르지만, 2018년 1월 개발된 「고등학교 한국사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에 이어 7월 확정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도 ‘제주 4·3 사건’이 들어간 점은 앞으로 『한국사』에서 반드시 제주 4·3 사건을 다루어야만 한다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바람직스럽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은 다양한 교과서를 집필하는 데 제약을 주지 않기 위해 대강화 원칙에 따라 최소화했기 때문에, ‘제주 4·3 사건’은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이 아니라 ‘학습 요소’에 들어갔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중 “[10한사04-01] 8·15 광복 이후의 정치적 상황을 세계 냉전 체제 형성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이해한다”(소주제 :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에는 꼭 서술해야 할 ‘학습요소’에 ‘8·15 광복, 냉전,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좌우 합작 운동, 남북협상’ 등과 함께 ‘제주 4·3 사건’이 포함되어 있다.<sup>9)</sup> ‘학습요소’가 총 6개인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

9) 이환병,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시안」, 『중학교역사·고등학교 한국사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시안개발(3차공청회)』, 2018년 1월 26일, 62~63쪽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2018.

으로 제주 4·3 사건의 중요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제주 4·3 사건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이전 단순히 ‘단독 정부 수립을 방해한 좌익의 활동’이나 ‘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서술하도록 규정되었던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국현대사 속에서 제주 4·3 사건의 성격을 올바르게 밝히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집필자들이 제주 4·3 사건을 상대적으로 비중 있게 서술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결실은 그동안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밝혀온 역사학계의 성과가 축적되고 민주화의 진전으로 사회의 인식이 변화된 측면도 있지만, 제주도민의 열의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 2009·2011 개정 교육과정의 대강화 원칙에 따라 제주 4·3 사건이 직접 언급되지 않아 제주도 내 반대 여론이 비등했던 상황에서,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가 국사편찬위원회를 방문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를 토대로 제주 4·3 사건을 교과서에 기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고, 그 뒤에도 제주도교육청 등이 각종 집필 관련 공청회와 모임에서 지속적으로 사건의 내용이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할 당위성과 대안을 촉구·제시해왔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교과서 내 제주 4·3 사건에 대해 서술할 지면을 확보할 수 있는 명분과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에 의하면, 시계열성을 고려해 중학교는 전근대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중심으로 확정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제주 4·3 사건에 대한 서술은 중학교에서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많은 반면, 고등학교는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렇다고 반드시 제주 4·3 사건이 현행 교과서보다 분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제주 4·3 사건은 국가적 차원의 사건이고, 무엇보다 제주도에서는 가장 중시되는 사건이지만, 교과서에서는 서술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필자들이 제주 4·3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룰 수 있는 명분과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예컨대, 제주 4·3 사건이 국가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그 재발을 방지함과 동시에 평화와 인권을 신장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도 모범적인 사례로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제주 4·3 사건만 단독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사례를 하나의 주제로 묶어 교과서 내 특별 코너로 구성하고, 이를 교육과정에서 제주 4·3 사건이

‘학습요소’로 들어간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넣음으로써 서술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6월 민주 항쟁과 민주주의의 발전’ 단원은 시기상 6월 민주 항쟁 이후를 다루는 만큼, 국가 폭력이나 인권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과 묶어 제주 4·3 사건을 다룰 경우 분량을 많이 할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제주 4·3 사건에 대해 1면 전체를 특집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스럽지만, 이러한 특집 구성은 서술상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으로 실제로 반영되기 쉽지 않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과서에서 제주 4·3 사건을 어떻게 구성·서술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사』를 비롯해 거의 모든 교과서는 본문과 그 외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현행 『한국사』는 한두 출판사만 제외하고 본문에서 관점·서술방식과 양적인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등을 근거로 제주 4·3 사건의 개요를 비교적 충실히 서술하였다. 그러나 교과서별로 제주 4·3 사건의 배경·주도세력·성격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편차가 있고, 학계에서도 제주 4·3 사건의 명칭뿐 아니라 사건 자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초는 낙관할 수 없지만 향후 교과서에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 이외에 최근의 학계 성과를 적극적으로 교과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서술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보완·심화하거나 본문에서 다루지 않은 현재와 미래의 내용을 제시하는 다양한 사진·자료와 코너를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본문 외 구성 요소는 현행 『한국사』에서 집필진의 역량과 관심에 따라 다양하게 배치되었지만,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 자기주도학습과 탐구활동을 하거나 역사적 사고력 배양 등 역사 교육의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코너가 거의 없었다. 사진의 경우도 제주 4·3 사건의 진상이나 평화와 인권의 신장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국가의 진상 규명과 사과 등이 이뤄졌음에도 이념 편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 지면의 제한과 집필자의 성향 탓도 있다.

그렇지만 제주 4·3 사건은 세계적으로 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거사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으며, 분단의 실체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평화·인권의 소중함과 화해·상생의 메신저로 내세울 만한 모범사례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사건 희생자에 대한 위령탑·평화공원 등을 만들어 그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집필자는 이러한 사례를 제주 4·3 사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 요소를 다양하고 참신하게 마련하는 데 힘쓰고, 제주 4·3 사건 관련 연구자·연구소·단체들도 이를 뒷받침하는 교재와 자료를 개발·활용하는 데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육부, 2018.
-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 권희영 외, 『한국사』, 교학사, 2014.
- 김중수 외, 『한국사』, 금성, 2014.
- 도면희 외, 『한국사』, 비상, 2014.
- 왕현종 외, 『한국사』, 두산동아, 2014.
- 정재정 외, 『한국사』, 지학사, 2014.
- 주진오 외, 『한국사』, 천재교육, 2014.
- 최준채 외, 『한국사』, 리베로스쿨, 2014.
- 한철호 외, 『한국사』, 미래엔, 2014.
-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 편, 『한국 교과교육과정의 변천 : 고등학교』,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 김득중, 「한국사 교과서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 관련 서술 분석」, 『4·3과 역사』 8, 2008.
- 도면희,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제주 4·3 관련 서술 분석」, 『검인정 역사교과서 제주 4·3 집필기준안 연구 발표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7.
- 김한중,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연구』, 선인, 2006.
- 박진동, 「해방후 현대사 교육 내용 기준의 변천과 국사교과서 서술」, 『역사학보』 205, 2010.
- 박태균, 「한국현대사의 논쟁에 대한 재평가와 교과서 수록 방안」, 『역사학보』 205, 2010.
- , 「2009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현대사 부분 분석」, 『역사교육』 116, 2010.
- 조한준, 「역사와 교육과정 내 제주 4·3관련 내용 분석」, 『검인정 역사교과서 제주 4·3 집필기준안 연구 발표자료집』,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2017.
- 지수걸, 「한국 근현대사 논쟁과 10학년 『역사』 교과서 편찬」, 『역사교육』 109, 2009.
- 최상훈, 「역사와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교육연구』 12-2, 2005.
- 한철호, 「고교 역사교과서의 제주 4·3 사건 서술 경향과 과제」, 『사학연구』 103, 2011.



Abstract

## The Trend and Tasks in the Account on Jeju 4·3 Incident in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Han, Cheol-Ho

Jeju 4·3 Incident is one of the cases showing a representative cross section of contemporary history in South Korea. Though the truth of the Incident had been revealed and impair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s until regaining it in 2003. The dispute in terms of the cause, the core, and the evaluation of the Incident, however, has been continuing over. Reflecting the circumstances, the accounts on the Incident i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show the interrelationship of current situation, curriculum, frame of reference and perspective of the authors. The paper analyzes the trend in the description on Jeju 4·3 Incident in Korean History Textbooks and suggests some ideas for future textbook writing.

First, we need to be more careful in setting up Curriculum and Description Criteria for history textbook that influence the authors' writings of textbooks significantly. Curriculum and Writing Guide for Korean History were built under the influence of the political situations at that time. The account on Jeju 4·3 Incident has shown deviation. Thus it is suggested to be revised Curriculum in order to secure the author's autonomy and neutrality to the maximum while providing the minimal writing guideline. On the one hand, to provide the necessity and justness of the account on the Incident the recent results such as *Reports on the Truth of Jeju 4·3 Incident* have to be

reflected.

Next, the textbook authors should write correctly with a correct perception on Jeju 4·3 Incident. Some authors don't write even the fact of the Incident reflecting their own disposition. The government is impairing the neutrality of history education by its controlling and nullifying the intent of the inspection system. The textbook authors, however, should describe the truth of the Incident with a sense of mission as historian and history educator because history textbooks guide history education and have a strong influence to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se historical perspectives don't be formed enough. Thus the authors of textbooks should describe Jeju 4·3 Incident for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 of history education. The Textbooks must lead the students to understand the Incident in diverse perspectives and to find its nature and significance for themselves beyond simple memorization. Though the authors have less their space for writing due to the decrease in the quantity of contemporary history part, they are encouraged to do their best to provide the measures for fostering the sense of peace in tune with the times of writing about Jeju 4·3 Incident.

Lastly, it is suggested that the textbook writers, researchers, institutes, and other institutions have more communication to interchange information relevant to Jeju 4·3 Incident. By increasing their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in-depth studies of the Incident, they should develop matters for the textbook writing and expand the scope of mutual understanding. This will help the authors write the history textbooks by grasping the truth and essence of Jeju 4·3 Incident in spite of relatively insufficient space permitted in history textbook.

Key Words : Jeju 4·3 Incident, Textbook, 2015 Revised Curriculum, Description Criteria, Korean

History Textbook, *Reports on the Truth of Jeju 4·3 Incident*

집필 : **한철호**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E-mail: hanch777@dongguk.edu)

논문투고일: 2018. 09. 10

심사완료일: 2018. 10. 12

계재확정일: 2018. 10. 134